

“김 지사 내란부화수행협의 재검증을”

전북 시민단체 “선거 이전에 진실 규명 요구 지역사회 전반서 확산… 민주당의 책임 있는 대응 있어야”

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북 자존심 회복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재검증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가칭 12.3 내란청산 민중위원회 회원 40여명은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관영 후보의 계엄 대응 논란이 지역사회의 중대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칭 12.3 내란청산 민중위원회 회원 40여명은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북 자존심 회복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재검증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논란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선거 이전에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지역사회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지목했다.

시민단체 측은 공관위가 12.3 계엄 사태 당시 대응과 관련한 의혹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김 후보의 경선 참여를 결정했다고, 사실상 문제 제기를 배제하고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판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한 검증 없이 후보를 선거에 내보내고 그 판단을 도민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우려도 지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원택 후보 측은 김관영 후보의 계엄 대응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민주당의 재검증을 공식 요구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김 후보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후 도민안전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응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브리핑 과정에서 계엄 상황 시 행정 협조 및 인력 지원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한 상황 관리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발언에서는 계엄에 따른 대응

필요성, 군 매뉴얼 준수, 계엄법에 따른 인력 지원 가능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관영 후보 측은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현재까지 공개된 영상과 문서 자료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며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하며, 공정한 경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논란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대응과 공천 재검토,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가칭 12.3 내란청산 민중위원회에는 전북인권선교협의회(회장 이광익 목사)와 목회자정의평화회의회(회장 소복석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만호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추진 ‘한 고비’

김윤덕 국토부장관,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일궈내



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늘려 잡으면서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고등행정법원(제4-2행정부)은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김 장관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송을 이끌었던 장본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남다른 애용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9월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악영향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시민단체는 새만금공항 건설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국토부 공청정책관, 서울항공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법무법인 변호사 등 국토부 대응전략팀을 구성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소송을 직접 진두지휘했으며, 동시에 새만금

차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고,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집행정지를 구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결정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한시를 놓게 되었지만 아직 분안 소용이 남은 만큼 안심하기 이르다는 판단이다.

김윤덕 장관은 “우선 집행정지 기각 및 각하 판결로 사업진행의 한 고비를 넘겼다”며 “이제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이 난관을 딛고 전북도민의 염원에 따라 반드시 새만금공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민선8기 전북도정, ‘책임지는 공간’ 아닌 ‘거쳐 가는 자리’

외지 인사 중심 인사 구조·주말 통근형 행정·도덕성 일탈 등 겹쳐… ‘총체적 인사 참사’ 지적

민선 8기 김관영 전북 도정이 ‘총체적 인사 참사’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는 외지 인사 중심 인사 구조, 주말 통근형 행정, 반복되는 도덕성 일탈이 겹쳐져 인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6일 “전북 도정 인사에서 전북이 사라지고 있다”며 “전북이 책임지는 공간이 아니라 ‘경력 관리용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지사를 포함한 핵심 간부와 산하기관장 상당수가 가족과 생활 기반을 수도권에 둔 채 전북에서는 임시 거주 형태로 근무



하는 ‘주말 통근형 공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역시 ‘나’ 등급에 그쳐며 전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결국 외부 인사 중심 인사가 강조됐지만 성과·체감도·경쟁력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무난한 실패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도정 핵심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 정무리원의 음주운전 사건, 산하기관장 전락 논란, 조직 내 갑질과 관련한 남용, 일부 간부의 비위 의혹까지 이어지며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인사 구조는 행정 책임성 약화로 이어진다. 지적이다. 임기 후 떠날 사람들이 정책을 설계하는 구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도 갑질’, ‘도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사 문제가 반복되며 조직 내부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능력 중심 인사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지역 배제와 조직 통제 약화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문제에도 미온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책임 지지 않는 ‘도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외부 인사 중심 구조에 불과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효용도, 성과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희성 기자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능력 중심 인사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지역 배제와 조직 통제 약화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문제에도 미온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책임 지지 않는 ‘도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외부 인사 중심 구조에 불과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효용도, 성과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희성 기자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능력 중심 인사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지역 배제와 조직 통제 약화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문제에도 미온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책임 지지 않는 ‘도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외부 인사 중심 구조에 불과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효용도, 성과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희성 기자

김동구 도의원 예비후보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동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군산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4시,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44번지 두레빌딩 1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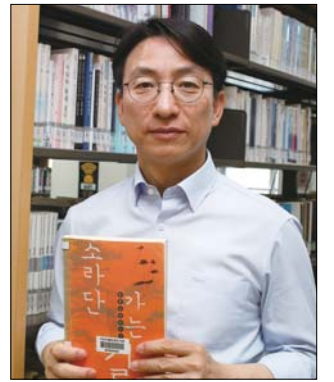
이번 개소식은 김 예비후보의 공식 선거 활동을 알리는 자리로, 신영대 지역위원장과 문승우 의회장을 비롯해 도지사·시장 출마예정자 등 지역 주요 정치인과 시민들이 참석한 예정이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주요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 김 예비후보의 비전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북 산업 대전환과 군산 미래 발전 전략, 시민 중심의 지역 혁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군산과 전북은 산업과 경제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쌓아온 경험의 바탕으로 지역의 더 큰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사무소를 시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상시 개방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문학도서 공공대출권 도입 ‘핵심 공약’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전국 최초로 ‘문학도서 공공대출권(PLR)’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문화정책 혁신에 나섰다.

임 예비후보는 26일 익산시 공공도서관에서 문학도서 대출 시 작가와 출판사에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익산형 PLR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문학도서가 한 차례 대출될 때마다 작가에게는 100원, 출판사에는 50원이 지급된다.

이번 공약은 도서관 무료 대출 증가로 인해 저작권자의 수익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과 캐나다 등 35개국 이상에서 시행 중인 공공대출권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임 예비후보는 이를 통해 작가와 출판사가 상생하는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익산이 가깝 이병기, 윤홍길, 안도현 등 문학 인재를 배출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 ‘작가가 존중받는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산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관내 도서관 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5만 권의 문학도서 대출을 기준으로 총 4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작가 보상금 약 2억5,000만원과 출판사 보상 및 시스템 운영비를 포함한 수치로,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익산형 PLR’ 제도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에도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독서 활동이 곧 작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인문학적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이와 함께 ‘익산형 PLR’ 제도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에도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독서 활동이 곧 작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인문학적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만호 기자

“금융중심지, 껍데기 아닌 자산 남는 구조로 전환해야”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



다가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수 세무사가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금융중심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의 금융중심지는 단순한 지점이나 외형적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건물과 기관만 늘어나는 ‘껍데기 금융’이 아니라, 전북에 자산과 수익이 실제로 남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자산 운용사 100개가 들어와도 전북에는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다”며 “‘돈만 전북은 땅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한 뒤 분산하는 방식’의 개발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기업을 불러왔지만 이익은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금융중심지 역시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돈은 전북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전북에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금융자본화 △지역 우선 투자 △상생형 금융구조를 제시했다. 우선 “새만금은 더 이상 분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수 세무사가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금융중심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했다.

끝나는 땅이 아니라 전북이 소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자산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투자를 전북 펀드를 통해 진행하고, 수익이 지역에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등 전북에서 형성된 자금은 반드시 전북 기업과 산업, 미래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돈이 외부로 먼저 빠져

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은 일부 기관의 수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기업과 청년, 도민에게 기회로 확산돼야 한다”며 “투자 성과가 지역 전체로 이어지는 상생형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진정한 금융중심지는 이름이 아니라 구조”라며 “전북에는 자산과 수익, 그리고 결정권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새만금 분양 중단 및 임대·투자 중심 전환 △7조원 규모 전북 펀드 조성 △금융중심지를 산업·복지·창원 투자 플랫폼으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30년 동안 조성한 새만금을 일관 산업단지처럼 분양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며 “임대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지역 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 역시 중요한 거버넌스 주체”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지역경제 회복·도약 정책 지속돼야”

전북 소상공인 100여명, 김관영 도지사 지지 선언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이 김관영 지사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정치권에 작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인사들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훈 변호사의 인솔 아래 김관영 지사의 민선 9기 도정 연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공동 입장을 이덕훈 변호사가 발표했으며, 지역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과와 향후 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지사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년간의 경제 성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행정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역시 주요 지지 이유로 꼽혔다.

이들은 “김 지사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호흡하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